

주간 통일정세

2017-43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군사
3. 경제
4. 사회문화
5.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10.29	北 김정은, 평양화장품공장 시찰...세계적 화장품과 경쟁 지시(연합뉴스)
	10.30	北 “우주개발은 자주적 권리...위성 더 많이 쏠 것”(연합뉴스)
		北, 제재 국면서 “자력갱생으로 혁명 완수할 것”(연합뉴스)
10.31	北 신문 “인민생활 질적 비약 위해 경공업 증산·혁신해야”(연합뉴스)	
	北 단체 “쌍중단 주장, 핵문제 인과관계 안 봐...무책임한 처사”(연합뉴스)	
군사	11.3	北, 美 B-1B 한반도출격 비난...“최후 발악, 경거망동 말아야”(연합뉴스)
경제	-	-
사회 문화	10.28	北, ‘세계 최대’ 주장 세포지구 축산기지 준공(연합뉴스)
외교 국방	10.28	北 “디아베, ‘북풍몰이’로 정치적 야욕 실현” 비난(연합뉴스)
	10.30	北 통신 “美, 핵전쟁장비 대대적 집결...후과 숙고해야”(연합뉴스)
		北, 英 내무차관 발언 비난...“사이버 공격 말도 안 돼”(연합뉴스)
	11.1	北, 나토 사무총장 발언 비난...“우리 핵보유 매도해 흑백 전도”(연합뉴스)
11.2	시진핑, 김정은에 답전...“새로운 정세하 관계발전 추동”(연합뉴스)	
		北, ‘핵실험장 붕괴로 200명사망’ 日보도에 “허위모략” 일축(연합뉴스)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고 일자	보고 내용	수행자	비고
10.29	새로 개건된 평양화장품공장 현지지도	리철주, 안정수, 김여정, 조용원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10. 29

■ 北 김정은, 평양화장품공장 시찰...세계적 화장품과 경쟁 지시(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확장 개건 공사를 마친 평양화장품공장을 시찰하고 세계 유명 화장품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을 주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전함.
- 김 위원장은 연건축면적 2만 9천200㎡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281종, 1천 122대의 새로운 설비를 설치한 공장을 둘러보고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할 수 있게 통합생산 및 경영정보관리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구축했다”며 만족감을 표시함.
- 이어 “(공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의 가지 수도 많고 질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용기의 모양은 물론 포장곽도 참 곱다”며 “아름다워지려는 여성들의 꿈을 실현해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다.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7. 10. 30

■ 北 “우주개발은 자주적 권리...위성 더 많이 쏠 것”(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막을 수 없는 세계적 추세, 우주개발 사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주개발은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라며 “우리는 앞으로 국가 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정지위성을 비롯한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우주공간으로 쏘아 올릴 것”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우주개발을 통하여 경제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오늘 국제적인 추세”라며 캄보디아,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인공위성 개발 성과를 소개했으며, 이어 “일부 특정한 나라들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여 유엔 제재 결의를 조작해내고 합법적인 주권국가의 우주개발을 가로막으려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자주권, 발전권 침해 행위”라며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를 비난함.
- 신문은 “우리 공화국은 지난해 2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우주 진입으로 실용위성 개발단계에 들어섰다”며 “또한 새형의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대출력 발동기(엔진) 지상분출 시험에서 대성공함으로써 우주 정복으로 가는 보다 넓은 길을 닦아놓았다”고 주장함.

■北, 제재 국면서 “자력갱생으로 혁명 완수할 것”(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30일 교수·박사 박혜숙 명의로 게재한 ‘백두의 행군길을 곳곳이 이어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풍모’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지금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은 그 무슨 초강경 제재로 우리 인민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아보려고 발악하고 있지만, 그것은 바닷물이 마르기를 바라는 허황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난함.
- 그러면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전진시켜온 조선 혁명을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완수하려는 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라며 “격동적인 (북한의) 현실은 자력갱생의 힘은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보다 더 강하고 최후 승리는 조선 인민의 것이라는 것을 뚝뚝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함.
- 특히 “오늘 우리 인민이 틀어쥔 자력갱생의 보검은 다름 아닌 과학기술”이라며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한 자력갱생 대고조의 폭풍으로 적대세력들의 제재·봉쇄 책동을 단호히 쳐갈기고 세계의 상상봉에 우뚝 올라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비상한 각오와 헌신적 투쟁은 강국의 이상을 현실로 전변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2017. 10. 31.

■北 신문 “인민생활 질적 비약 위해 경공업 증산·혁신해야”(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31일 1면에 ‘경공업 전선에서 생산적 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자’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당의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를 높이 받들어 인민생활 향상에서 질적인 비약을 이룩하자면 경공업 전선에서 증산과 혁신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경제발전 방향과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김정은)께서는 새로 개건된 평양시 안의 경공업 공장들을 연이어 현지지도 하셨다”며 최근의 류원신발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 시찰을 언급함.
- 그러면서 경공업 종사자는 “인민들에게 행복의 웃음을 안겨주는 인민복무전의 전초병”이라며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필수품, 맵시 있고 쓸모있는 소비품,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다량생산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 北 단체 “쌍중단 주장, 핵문제 인과관계 안 봐…무책임한 처사”(연합뉴스)

- 북한의 대외 선전단체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와 ‘북침핵전쟁연습 반대 전민족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한 ‘공동고발장’에서 이같이 밝힘.
- 이들 단체는 “일부 나라들이 정의의 우리 핵과 침략적인 미국의 핵을 동일 선상에 놓고 ‘쌍중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조선반도(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과 인과관계, 자위의 핵과 폭제의 핵을 가려보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함.
- 이어 “세계의 양심과 공정한 여론은 누가 누구를 위협하고 어느 것부터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옳게 인식하고 미제의 핵전쟁 도발 책동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밝힘.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 특이사항 없음.

나. 한국 및 미국

2017. 11. 3.

■ 北, 美 B-1B 한반도출격 비난…“최후 발악, 경거망동 말아야”(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3일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압살하려는 미제의 광란적인 위협·공갈 책동은 10월에 이어 11월에도 계속되고 있다”라며 “미제는 11월 2일 또다시 핵전략폭격기 B-1B 편대를 남조선 지역 상공에 은밀히 끌어들여 우리를 겨냥한 기습 핵 타격 훈련을 벌여놓았다”고 비난함.

- 그러면서 “미제가 핵 전략자산들을 연이어 들이밀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최후 발악하고 있지만, 그에 놀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라며 “미제 호전광들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함.
- 통신은 “미제 공중비적들은 일본 오키나와 주변 상공을 거쳐 비행하다가 남조선 지역 제주도 상공에서 조선 동해 상공으로 방향을 바꾼 후 미 공군과 괴뢰 공군 전투기들의 엄호 밑에 상동 사격장 상공에 날아들어 우리의 중요 대상물들을 타격하는 것으로 가상의 핵폭탄 투하 훈련을 감행했다”며 B-1B 편대의 구체적인 비행경로를 공개하기도 함.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 특이사항 없음.

다. 대외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10. 28.

■ 北, '세계 최대' 주장 세포지구 축산기지 준공(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추진된 대규모 사업의 하나인 '세포지구 축산기지'가 준공했다고 북한 매체가 28일 전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세포지구 축산기지가 조국역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창조물로 일떠섰다”면서 “우리 당의 웅대한 대자연 개조 구상과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대규모 축산기지로 건설될 세포지구 축산기지 준공식이 27일에 진행되었다”고 보도함.
- 노동신문은 “(강원도) 세포, 평강, 이천군을 포괄하는 드넓은 대지에 수만 정보의 풀판(초지)이 새로 조성되고 바람막이숲과 풀판 보호림, 방목도로, 배수로, 저류지들이 형성되었으며 수천 동의 살림집과 공공건물, 통합생산 체계와 수의방역 체계가 확립된 집짐승 우리와 수의방역 시설들, 축산물 가공기지를 갖춘 현대적이며 과학적인 대축산기지”라고 세포지구를 소개함.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10. 30.

■ 北 통신 “美, 핵전쟁장비 대대적 집결…후과 숙고해야”(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미 해군의 3개 핵 항공모함 전단 서태평양 해역 집결 등을 거론하며 “미국은 후과를 놓고 숙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이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에 각종 최신 핵전쟁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집결하며 정세를 최악의 폭발계선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힘.
- 통신은 “10월 중순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타격단과 핵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 40여척의 각종 전투함선들, 전투기들이 동원된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 남조선 연합해상훈련이 감행된 데 이어 최근에는 시어도어 루즈벨트호를 비롯한 3개의 핵항공모함 전단이 동시에 우리 주변 수역에 전개되고 있다”고 비난함.

나. 북·중 관계

2017. 11. 2.

■ 시진핑, 김정은에 답전…“새로운 정세하 관계발전 추동”(연합뉴스)

- 중앙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얼마 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위원장 동지가 중국 공산당 제19차 대회가 진행되고 내가 다시금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선거(선출)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취임한 것과 관련하여 각각 축전을 보내준 데 대하여 나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위원장 동지에게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고 밝힘.
- 그러면서 시 주석은 “새로운 정세 하에서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노력하여 두 당, 두 나라 관계가 지속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들에게 더 훌륭한 행복을 마련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공동의 번영을 수호하는데 적극적인 기여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 이어 “조선 인민이 김정은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사회주의 건설 위업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한다”고 덧붙임.

다. 북·일 관계

2017. 10. 28.

■ 北 “日아베, ‘북풍물이로 정치적 야욕 실현’ 비난(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28일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일본의 아베 일당이 중의원 선거기간 북핵위협론과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전혀 없이 요란하게 떠들며 히스테리적인 반공화국 대결소동을 피워댔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함.
- 담화는 “정치적 무능과 온갖 부정부패 행위로 심각한 통치 위기에 몰릴 때마다 반공화국 모략소동을 일으켜 내외여론을 오도하고 그를 악용하여 권력을 부지하는 것은 비열하고 간특한 일본 반동들의 상투적 수법”이라고 비난함.
- 이어 “이번 일본 중의원 선거 놀음 역시 아베와 그 일가 족속들의 부정추문사건으로 초래된 극도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 나아가서 내외가 한결같이 반대하는 헌법 개악을 실현하여 군국주의 야망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일본 반동들의 음흉한 계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함.

2017. 11. 2.

■ 北, '핵실험장 붕괴로 200명사망' 日보도에 "허위모략" 일축(연합뉴스)

- 북한은 2일 6차 핵실험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 지하갱도가 붕괴해 200여 명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언론보도를 '허위·모략보도'라고 일축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일본에는 왜 허위보도가 필요하였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본 당국은 얼마 전 TV아사히를 내세워 우리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붕괴' 현상으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였다고 하면서 붕괴 원인은 '핵실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허위보도, 모략보도를 내게 하였다"고 비난함.
- 통신은 "이것은 그 어떤 군사적 위협과 야만적인 제재로도 우리의 핵 무력 발전을 막을 수 없게 된 미국과 일본 반동들이 우리를 정치 도덕적으로 중상하기 위해 얼마나 비열하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함.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10. 30

■ 北, 英 내무차관 발언 비난...“사이버 공격 말도 안 돼”(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 5월 전 세계 150여 개국을 강타한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 공격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벤 윌리스 영국 내무부 차관의 발언을 30일 비난함.
- 조선-유럽협회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이 영국의 보건체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국제사회를 기만하여 우리에게 대한 불신을 더욱 조장시키고 대조선(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하려는 불순한 행위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이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존엄을 해치려는 미국의 발광적인 적대시 책동에 편승한 영국 정부의 처사는 우리 인민들의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영국이 법치국가라면 우리에게 대한 무근거한 억측을 내들리

면서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려는 비열한 행위를 한 데 대하여 심각히 반성하고 처신을 바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비난함.

2017. 11. 1.

■ **北, 나토 사무총장 발언 비난…“우리 핵보유 매도해 흑백 전도”(연합뉴스)**

- 조선-유럽협회 대변인은 1일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나토 사무총장이 일본을 행각하면서 북조선이 유럽의 대부분과 미국의 서부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한다느니, 북조선의 핵 및 미사일 계획은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되므로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느니 하는 망발을 하였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담화는 “우리의 핵 보유를 유럽과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는 것은 흑백을 전도하는 불순한 꾀변”이라며 “조선반도(한반도) 사태의 본질은 우리를 적대시 하며 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 미국과 그에 맞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려는 우리 공화국 사이의 대결”이라고 강변함.
- 이어 “나토가 미국의 군사력에 의거하는 기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명색이 기구 책임자이고 미국인도 아닌 나토 사무총장이 미 행정부 관리보다 더 트럼프 흉내를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꼬았음.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10.28	국방부, 한미국방장관 회담에 “이견 거의 없었다…화기애애”(연합뉴스)	
	10.30	강경화 “사드 추가배치 검토 안해…‘MD불참’ 기존입장 불변”(연합뉴스)	
		한미일 합참의장, 북핵 대응 논의…“정보공유·대비태세 협력”(연합뉴스)	
	10.31		美 국무부, 한중 관계 회복 환영 (자유아시아방송)
	11.1		“트럼프, 한국서 北 최대압박 국제공조 촉구”…DMZ 방문 안한다 (연합뉴스)
11.3		맥매스터 인터뷰 “트럼프, 한미동맹 미래 긍정 시각 말할 것”(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10.29		왕이, 바자회서 노영민 韓대사 만나…“한중관계 진전기대”(연합뉴스)
	10.30		中외교부 “사드 반대하나 조속한 한중관계 안정·건강궤도 원해”(연합뉴스)
	10.31		中외교부 “한중, 각 분야 조속한 교류 정상화 합의”(연합뉴스)
한·중 “北추가도발 억제·상황 안정적 관리 공동 노력”(연합뉴스)			

다음 주 한중 정상회담...“관계 회복 첫 단계”(자유아시아방송)			
	11.1		中, 한국산 수입 정상화되느냐 질문에 “각 분야 교류 중시한다” (연합뉴스)
	11.2	정부 “한중간 이면합의 없어...中 '약속' 표현에 문제제기”(연합뉴스)	
			中외교부, '한반도 전쟁불가' 文대통령 발언지지(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11.1	정부 “일본 새 내각 출범 축하...日정부와 계속 협력” (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10.28		中 왕양 부총리, 美 상무장관과 통화...정상회담 의제 논의(연합뉴스)
	10.31	美 상무부, 중국산 스테이플러 심에 최대 59% 관세(연합뉴스)	
	11.2		中 “트럼프 8~10일 방중...중대 국제·지역문제 깊이있게 논의” (연합뉴스)
			中상무부 “트럼프 방중 기간 美와 비즈니스 협약 체결”(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10.29		“日아베, 방일 트럼프에 ‘대북 군사적 선택지’ 발언 지지 표명” (연합뉴스)
	10.30		일본언론 “美, 日과 정상회담서 무역적자 개선 요구 방침”(연합뉴스)
	10.31	트럼프·아베 또 통화...“정상회담서 대북 논의 심화”(연합뉴스)	
	11.3	맥매스터, 대북 무력행사 결정시 “日 모든 레벨서 알게 될 것” (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10.28	美정부, 러시아 방산업체·기관 등 39곳 제재대상 ‘늑장지정’(연합뉴스)	
	10.31		러시아 “미국 대선 개입 정황 없어” (미국의소리)
	11.1	“틸러슨 美국무, 주미 러시아대사와 북핵 문제 등 논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11.2		日 “中해경선, 센카쿠열도 영해 침입”...올들어 26일째(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11.2	中·러 총리 회동, 긴밀 협력 합의...트럼프 견제하나(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10. 28.

■ 국방부, 한미국방장관 회담에 “이견 거의 없었다…화기애애”(연합뉴스)

-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8일 한미 양국 국방장관 주관 아래 진행된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한미간 가장 큰 이견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견이 거의 없었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실무선에서 논의한 것을 다 승인하는 등 역대 SCM 중 가장 무난하게 잘 진행한 것 같다”고 평가함.
-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에 관해서는 미국의 입장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적”이라며 “한미간 통합 프로세스에서 공유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다. 송 장관이 누차 강조했다듯, 한국이 이를 성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힘.
- 이번 SCM에서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가칭 미래연합사령부 창설 방안은 승인되지 못했으나,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근본적인 입장차가 아니라 세부적인 조율이 덜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2017. 10. 30.

■ 강경화 “사드 추가배치 검토 안해…‘MD불참’ 기존입장 불변”(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 증가와 실효적 대응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함.
- 강 장관은 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배치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조기구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함.
- 이와 함께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조함.

■ **한미일 합참의장, 북핵 대응 논의…“정보공유 대비태세 협력”(연합뉴스)**

- 합동참모본부는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정경두 대한한국 합참의장과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일본 통합막료장을 초청해 29일 하와이에 있는 미 태평양사령부에서 3국 합참의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힘.
- 합참은 “3국 합참의장은 최근 일본 홋카이도 열도 상에 2차례 발사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며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심각한 위반 행위임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3국이 최대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함.
- 이어 “3국 합참의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간 정보공유와 대비태세 등 안보 분야의 협력에 있어서 3국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함.

2017. 10. 31.

■ **美 국무부, 한중 관계 회복 환영(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무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회복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힘.
-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31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한국과 중국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forge)한다는 소식을 들어 기쁘다며 이러한 한중 관계 개선은 북한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역내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함.
- 노어트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면서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2017. 11. 1.

■ **“트럼프, 한국서 北 최대압박 국제공조 촉구”…DMZ 방문 안한다(연합뉴스)**

-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가진 전화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국회연설을 통해 북핵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에 동참하라고 요청하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밝힘.
- 이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방한 첫 공식 일정으로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민만찬을 소화하는 데 이어 8일에는 국회연설과 국립묘지 참배를 한 뒤 다음 행선지인 베이징으로 출국함.

- 하지만 성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비무장지대(DMZ) 방문은 일정상 이유로 결국 제외됨.

2017. 11. 3.

■ 맥매스터 인터뷰 “트럼프, 한미동맹 미래 긍정 시각 말할 것”(연합뉴스)

- 미국의 안보 사령탑인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방한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관련해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미래와 함께 인도-태평양 전역의 안보와 번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발언함.
-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되고 유익하며 호혜적인 한미동맹과 이 동맹의 엄청난 성공의 기록, 북핵 위협에 맞서 어느 때보다 더욱 긴밀한 협력과 동맹뿐 아니라 북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로 엄청나게 고통받는 국제사회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강조함.
-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이 지역의 모델로,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성취될 수 있는 사례로 언급할 것”이라고 설명함.

나. 한·중 관계

2017. 10. 29.

■ 왕이, 바자회서 노영민 韓대사 만나…“한중관계 진전기대”(연합뉴스)

- 노영민 주중 한국대사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9일 베이징(北京) 공인(工人)운동장에서 100여개국에 참가해 열린 중국 외교부 주최 국제바자회에서 처음으로 대면함.
- 왕 부장이 바자회 행사장에서 한국 부스를 직접 찾아와 노 대사를 만났으며, “노 대사께서 양국관계 우호(형성)에 다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대사가 오신 후로 양국관계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추후 재회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함.
-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왕이 부장이 유독 한국 부스에서 대사와 오랜 시간을 대화했다”면서 “북한 대사관은 그냥 스쳐 지나갔으며 지재룡 북한대사도 나오지 않았다”고 전함.

2017. 10. 30.

■ **중외교부 “사드 반대하나 조속한 한중관계 안정·건강궤도 원해”(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30일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임시 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한중 관계의 조속한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체제에 불참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한 평론을 요구받고 “우리는 한국 측의 이러한 세 가지 입장을 중시하며 우리는 미군의 한국 사드 배치를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고 발언함.
- 또한 “한국 측이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길 바란다”면서 “유관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한중 관계를 조속하게 안정되고도 건강한 발전 궤도로 되돌리길 바란다”고 언급함.

2017. 10. 31.

■ **중외교부 “한중, 각 분야 조속한 교류 정상화 합의”(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31일 오전 9시(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중한 양측은 중한 관계 등에 대한 소통 진행’이라는 제목으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불거졌던 한중 갈등과 관련, 양국이 각 분야에서 조속한 교류 정상화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발표문을 올렸다.
- 중국 외교부는 “최근 한중 양국은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와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 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외교 당국 간 소통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고 모든 외교 수단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문에 담음.
- 발표문은 “중한은 양국 관계를 고도로 중요시하고 공동문건 정신에 근거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추진하길 원한다”면서 “양국은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이 조속히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복귀하도록 노력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명기함.

■ **한중 “北추가도발 억제·상황 안정적 관리 공동 노력”(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은 31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및 긴장 완화 등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힘.
- 외교부는 “한중 양국은 북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엄중성 및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하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및 긴장 완화 등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힘.
- 이와 함께 한중 양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 모든 외교적 수단을 활용, 북한을 조속히 비핵화 대화로 복귀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대화 재개 방안 마련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함.

■ **다음 주 한중 정상회담…“관계 회복 첫 단계”(자유아시아방송)**

- 다음 달 10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열기로 함.
- 청와대는 한중 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두 나라 관계 개선과 관련한 양국 간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 정상회담의 의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이후 1년 넘게 경색돼온 한중 관계의 발전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2017. 11. 1.

■ **中, 한국산 수입 정상화되느냐 질문에 “각 분야 교류 중시한다”(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봉합으로 중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이 신속히 정상화되느냐는 질문에 양국이 경제교류 정상화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힘.
- 화 대변인은 “각 분야 교류에 대해서는 사실 중국도 중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중국이 함께 노력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는 데 양호한 조건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발언함.

- 그는 한중 공동 발표에서 중국 측이 사드 철회를 요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우리는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으며,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세 가지 약속을 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이미 공개적으로 사드 문제와 관련해 ‘3불(3不)’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함.

2017. 11. 2.

■ 정부 “한중간 이면합의 없어…中 ‘약속 표현에 문제제기”(연합뉴스)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합의를 둘러싼 이면 합의·구두 합의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면 합의는 없었다”고 밝힌 뒤 “발표 내용 그대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발언함.
- 노 대변인은 또 이른바 ‘3불(不)’을 한국이 중국에 약속(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부정)한 것처럼 중국 매체들이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측은 협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우리 안보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은 협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 정부가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밝혀온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고 강조함.
- 특히 노 대변인은 중국 외교부가 한국이 ‘약속’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항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약속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 이후에 그 표현이 중국의 표현으로 ‘입장표명’으로 다시 바뀌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설명함.

■ 中외교부, ‘한반도 전쟁불가’ 文대통령 발언 지지(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된다고 밝힌 데 대해 지지한다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고 2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힘.
- 그는 “중한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중요한 공동 인식과 공동 이익을 갖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중국은 유관 각국이 더 많은 대화와 접촉 노력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한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북핵 문제가 조속히 대화와 협상의 정상궤도로 돌아오도록 공동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다. 한·일 관계

2017. 11. 1.

■ 정부 “일본 새 내각 출범 축하…日정부와 계속 협력”(연합뉴스)

- 정부는 지난달 일본 총선을 거쳐 1일 제4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출범한 데 대해 “축하한다”며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힘.
- 외교부는 1일 발표한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제98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되고, 신 내각이 출범한 것을 축하한다”고 밝힘.
- 논평은 이어 “올바른 역사인식의 토대 위에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 정부와 함께 계속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10. 28.

■ 中 왕양 부총리, 美 상무장관과 통화…정상회담 의제 논의(연합뉴스)

- 중국 왕양(汪洋) 부총리와 미국 월버 로스 상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의제를 논의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28일 보도함.
- 왕 부총리는 전날 밤 로스 장관과 통화를 갖고 다음달 정상회담 관련 의제를 조율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 CCTV 인터넷판인 양시망(央視網)도 이날 두 사람이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 경제무역관계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2017. 10. 31.

■ 美 상무부, 중국산 스테이플러 심에 최대 59% 관세(연합뉴스)

-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관리청(ITA)은 30일(현지시간) 중국산 판지상자 봉함용 ‘ㄷ’자 모양 철사 침에 최대 59%의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림.

- 상무부는 상하이웨다(上海悅達)그룹과 항저우화위(杭州華裕)기계, 스탠리 워크스 패스트닝 시스템 등에는 13.74%, 나머지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58.93%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 ITA의 최종판정 결과는 내년 3월 13일께 나올 예정이며, 독립기관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업계 피해 관련 최종판정 결과는 내년 4월 26일께 발표됨.

2017. 11. 2.

■ 中 “트럼프 8~10일 방중…중대 국제·지역문제 깊이있게 논의”(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10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요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중대한 국제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발표함.
- 루 대변인은 “방중기간 양국 정상은 미중 관계와 공동 관심사인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함.
- 그는 이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중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성과를 거두도록, 함께 노력해 중미 관계 발전에 새롭고 강한 동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 中상무부 “트럼프 방중 기간 美와 비즈니스 협약 체결”(연합뉴스)

- 푸쯔잉(傅自應)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 겸 부부장은 2일 국무원신문판공실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중기간 미국 상무부 대표단과 경제 무역 행사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행사에서 비즈니스 협약도 체결할 것이다”고 밝힘.
- 푸 부부장은 “우리는 미국 측 상무부 대표단과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고, 일부 분야에 관해서는 공동 인식을 달성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방중 기간에 경제·무역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전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함.
- 푸 부부장은 미중 무역 불균형 문제에 관해서는 “양국 정부와 업계, 학자 모두가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다”며 “무역 불균형은 오래된 문제이자 새로운 화제로 양국의 경제·산업구조 차이, 통계제도의 영향 등 여러 원인이 있고 극도로 복잡하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함.

나. 미·일 관계

2017. 10. 29.

■ “**다아베, 방일 트럼프에 ‘대북 군사적 선택지’ 발언 지지 표명**”(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다음달 일본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직접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대북 대응 방침에 지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함.
-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다음달 6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무력행사의 가능성을 내비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자세에 대한 지지를 직접 언급해 굳건한 미일 동맹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보도함.
- 아베 총리는 회담뿐 아니라 회담 후 열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선택지’ 발언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발언을 할 계획임.

2017. 10. 30.

■ **일본언론 “美, 日과 정상회담서 무역적자 개선 요구 방침”**(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내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연간 700억 달러에 이르는 대일 무역적자의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니혼케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함.
- 신문은 미·일 정상회담에선 핵·미사일 개발로 도발 행위를 반복하는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7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대일무역적자의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자동차의 비관세 장벽, 쇠고기에 대한 높은 관세, 의약품 가격제도의 재검토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짐.

2017. 10. 31.

■ **트럼프·아베 또 통화…“정상회담서 대북 논의 심화”**(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30일 심야에 통화를 하고 내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시 대북 대응을 비롯한 지역 정세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20여 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 협력의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싶다”고 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며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냄.

- 내달 아시아 순방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일본(방문을)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100% 함께 한다”고 강조함.

2017. 11. 3.

■ 맥매스터, 대북 무력행사 결정시 “日 모든 레벨서 알게 될 것”(연합뉴스)

-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 결정 시 일본에 통보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NHK가 3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맥매스터 보좌관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결정할 경우 일본 측에 통보 여부를 묻자 “동맹국과는 열린, 투명성이 높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일본과 미국은 함께 대응하는 만큼 일본은 모든 레벨에서 알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함.
-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관계는 매우 강하다”며 “북한 위협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는 완전히 연대하고 있다”고 강조함.

다. 미·러 관계

2017. 10. 28.

■ 美정부, 러시아 방산업체·기관 등 39곳 제재대상 ‘늑장지정’(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러시아 군사·정보기관과 연계된 러시아 방위산업체 등 기업 39곳을 제재대상으로 지정, 발표함.
- 이날 지정대상에는 국영 무기 수출업체인 로소보로넥스포트, 무기제조업체인 칼라슈니코프 등 러시아의 대표적 군수기업들과 연방보안국(FSB), 대외정보국(SVR), 러시아군 총참모부 총국(군 정보기관) 등 러시아 정부 산하 6개 정보기관이 포함됨.
- 미 국무부 관계자가 이날 기자들과의 컨퍼런스콜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들 기업 및 기관들과 ‘중요한 거래’를 하는 개인들에게도 제재가 가해지며, ‘중요한 거래’의 기준에 대해서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함.

2017. 10. 31.

■ **러시아 “미국 대선 개입 정황 없어”(미국의소리)**

- 러시아 정부는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 씨에 대한 기소장에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어떠한 정황도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함.
-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한 번도 유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며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미국 내부 사안이지 러시아와 관계는 없다고 강조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어제(30일) 자신의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 씨가 기소된 것과 관련 “러시아와 공모는 없었다”고 밝힘.

2017. 11. 1.

■ **“틸러슨 美국무, 주미 러시아대사와 북핵 문제 등 논의”(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31일(현지시간)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와 만나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이날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이 국무부에서 안토노프 대사와 면담했다”면서 “면담 주제 중에는 북한 위협 대처 문제도 포함됐다”고 전함.
- 노어트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분쟁이 면담의 주요 주제였다면서 “두 인사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통합성 복원과 민스크 평화협정 이행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소개함.

라. 중·일 관계

2017. 11. 2.

■ **日 “中해경선, 센카쿠열도 영해 침입”…올들어 26일째(연합뉴스)**

- 중국 해경선 4척이 중일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에 침입했다고 일본 해상보안본부가 2일 밝힘.
- NHK에 따르면 해상보안본부는 이들 해경선이 이날 오전 10시께 센카쿠 열도 우오쓰리시마(魚釣島) 앞바다 일본 영해를 침입했다며 즉시 퇴거를 경고하고 있다고 발표함.

- 일본 외무성의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중국 대사관 공사에 전화해 “영토 침입은 일본의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함.

마. 중·러 관계

2017. 11. 1.

■ 中·러 총리 회동, 긴밀 협력 합의…트럼프 견제하나(연합뉴스)

-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가 31일 베이징(北京)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 만나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관계 강화에 합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함.
- 리 총리는 메드베데프 총리에게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 및 교류를 확대하고 신뢰를 공고히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다른 협력 체계와 마찬가지로 양국 간 정기적인 총리급 회담은 협력의 목표를 현실로 이뤄준다. 현 상황에서 중국은 개혁과 개방을 가속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배양할 것이며 전 세계의 국가와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 싶다”고 발언함.
- 이에 대해 메드베데프 총리는 19차 당 대회 성공을 축하하면서 “중러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이 고위급 그리고 미래 지향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환영한다”면서 “러시아는 중국과 더욱 발전된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발언함.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10.30	북한 성 폭행 가해자 처벌 집행 권고해야(자유아시아방송)
	11.1	북한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제3위원회 상정·외국인 수감자 영사보호 등 촉구(미국의소리)
		北인권결의안 유엔 제3위원회 상정·“北리더십 인권침해 책임”(연합뉴스)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 찬성·공동제안국 참여키로(연합뉴스)
	11.2	북한 인권, 나치 치하 보다 열악…김정은 제소해야(미국의소리)
유엔 “北, 굶주린 주민 안둬고 핵·미사일 개발”…인권결의 추진(연합뉴스) 미-한 엇박자 낸 유엔 결의, 예년보다 북한 비난 수위 크게 높여(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특이사항 없음
북한인권 남한동향	10.30	설립 1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北인권 가해자’ 245명 혐의 확인(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남북자 국문포로	10.28	유엔 북한인권 보고관 “중국 내 탈북자 불법 이민자 아냐”(미국의소리)
	10.30	인천 내년부터 탈북학생 대안교육 지원한다(연합뉴스)
대북지원	11.2	IFRC “북한 홍수 피해 구호 예산 32% 감소”(자유아시아방송)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10. 30.

■ “북한 성 폭행 가해자 처벌 집행 권고해야”(자유아시아방송)

- 제68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다음달 8일 북한의 이행 심의에서 북한 내 여성에 대한 성 폭력, 가정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옴.
- 한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 정보센터의 양진아 연구원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에서는 가정 폭력은 사회문제가 아닌 가족 간의 싸움으로 치부하고, 공권력을 가진 자에 의한 성폭행은 오히려 여성의 수치로 생각하는 문화 때문에 피해 여성이 이중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함.
- 북한인권 정보센터는 지난 2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속개되고 있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에 지난 봄 북한 여성의 인권 실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양 연구원은 특히 법을 집행해야 하는 보안원 등이 공권력을 남용해 구금시설 등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범죄를 자행하고도 처벌 받지 않는 일이 만연하다며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함.
- 보고서는 2010년 이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여성 73명과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북한의 심의 대상 기간인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여성 차별과 성폭행, 가정 폭력 문제를 기록하고 있음.

2017. 11. 1.

■ 북한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제3위원회 상정...외국인 수감자 영사보호 등 촉구(미국의소리)

- 북한 내 외국인 수감자들에 대한 영사 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의 새로운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되었음. 결의안은 11월14일 처리될 예정임.
-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한 새로운 북한인권결의안이 31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됨. 유엔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결의안 작성 과정에서 공동 제안국들로부터 건설적인 의견들을 들었다고 말함.
-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내부와 외부에서 외국인들에게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함. 또한 북한 내 외국인 수감자들에 대한 영사 보호도 촉구했다고 밝힘.

- 아울러 가장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5호 내용 가운데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전용과 우려되는 인도주의와 인권 상황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 국적자들을 위한 노동 허가를 제공하지 말도록 촉구한 내용도 새 결의안에 포함됨.
- 이밖에 북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감. 특히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4년 연속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北인권결의안 유엔 제3위원회 상정…“北리더십 인권침해 책임”(연합뉴스)**

- 새로운 북한인권결의안이 31일(현지시간) 유엔 위원회에 상정됨.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날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 위원회에 제출됨.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공동제안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함.
- 결의안은 유엔 전체 회원국에 회람될 예정이며, 제3위원회는 오는 14일께 채택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짐. 제3 위원회를 통과되면 다음 달 중순께 총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임.
- 결의안에는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동시에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특히 남북 이산가족 상봉중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당국에 억류된 제3국 국민에 대해 영사보호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전해짐.
- 이와 함께 ‘북한 인권 유린은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인권 유린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거론하는 의미임.
-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재차 들어간 것으로 전해짐.

■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 찬성·공동제안국 참여키로(연합뉴스)**

-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일 전해짐. 유엔 북한 인권논의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이날 “정부는 그동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참여해왔으며, 결의안에 찬성할 뿐

아니라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힘.

-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 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임.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공동제안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했으며, 유엔 전체 회원국 회람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제3위원회, 내달 총회에서 각각 채택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짐.
- 이 결의안에는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동시에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 “북한 인권, 나치 치하 보다 열악…김정은 제소해야”(미국의소리)

- 북한의 인권 상황은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 치하 소련에서 벌어졌던 학살과 탄압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밝힘.
- 송 전 소장은 31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가 70년 간 계속된 북한의 인권 유린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 사법 심판대에 세우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송상현 소장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ICC 재판소장을 역임함.

2017. 11. 2.

■ 유엔 “北, 굶주린 주민 안둬고 핵·미사일 개발”…인권결의 추진(연합뉴스)

- 북한이 굶주린 주민들을 돕는 대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만 재원을 쏟아 붓고 있다는 지적을 담은 새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 유엔에서 추진됨.
-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이런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유엔 회원국들에 회람 중이라고 AP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함.
- AP가 입수한 초안을 보면 새 결의안은 “북한의 오래되고 지금도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한다”고 명시함.
- 초안은 살인, 고문, 투옥, 성폭행, 강제 임신중절, 종교적 박해, 고의적인 기아, 실종 등의 인권 범죄가 “북한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저질러졌다”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인용해 북한의 인권 침해가 사실상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지도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짐.
- 이런 관점에서 북한 정부가 ▲ 정치범 강제수용소 폐쇄 ▲ 모든 정치범의 석방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대한 협력과 면죄 보장 ▲ 모든 주민에 대한 이동의 자유와 출국의 자유 보장 ▲ 망명 신청 허용 ▲ 추방 또는 재입국한 주민에

대한 처벌 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인권 침해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함.

- 특히 초안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재원을 전용함으로써 “인도주의와 주민의 인권 상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함.

■ 미-한 엇박자 낸 유엔 결의, 예년보다 북한 비난 수위 크게 높여(미국의소리)

- 지난주 채택된 유엔 총회 제1위원회 결의 L35호에 예년에 비해 북한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 같은 날 채택된 다른 두 건의 결의보다 수위가 높음.
-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올해 채택한 L35호에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5개의 문단에 모두 12번 등장함. 북한이 언급된 문단들은 ‘상기시키고’, ‘인식하고’, ‘강조하고’,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하고’,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시작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국제사회에는 안보리 결의 2375호 등 관련 결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음.
- L35호는 지난해와 2015년 총회 당시 같은 제목으로 채택된 결의 L26호와 비교했을 때 북한에 대한 언급이 크게 늘어난 점이 특징임.
- 지난해 71차 총회 때 통과한 L26호는 북한이 3개의 문단에 모두 5번 등장하고, 70차 총회의 L26호는 이보다 적은 2개의 문단에서 북한을 비난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높아지면서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이 올해 결의에서 크게 강화된 것으로 보임.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 결의의 단합된 행동’라는 이름의 결의 L35호는 지난달 27일 미국을 비롯한 144개 나라의 찬성으로 채택됨.
- 지난해까지 이 결의에 기권 표를 던졌던 미국은 올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섬. 반면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L35호에 기권했는데, 이 때문에 한국 정치권 등에선 이와 관련된 논쟁이 일기도 했음.

2. 북한인권 내부동향

- 특이사항 없음.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10. 30.

■ 설립 1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北인권 가해자' 245명 혐의 확인(연합뉴스)

-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한 북한 관리들의 혐의 수백 건을 파악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간 민간의 비슷한 시도는 있었지만, 정부가 직접 북한 관리들의 가해 내용과 일부 신원을 확보한 사실이 파악된 것은 처음임.
- 30일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0일 문을 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9월 말까지 약 1년간 '북한 인권 가해자 카드' 245건을 생산함.
-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겪거나 보고 들은 인권침해 사건을 당국이 수집·분석해 가해자별 신상정보와 혐의사실을 기록한 문건임.
- 검사 3명 등 12명 규모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로부터 매 분기 넘겨받은 245건의 탈북민 조사 문답서 중 205건을 분석해 이 같은 명단을 확보함. 이달 20일 추가로 문답서 110건을 전달받는 등 가해자 숫자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 현재 파악된 가해자 245명은 사실상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옛 국가안전보위부), 일반 경찰인 인민보안성(옛 사회안전부) 등 대부분 권력기구 소속 지도원·보안원임.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10. 28.

■ 유엔 북한인권 보고관 “중국 내 탈북자 불법 이민자 아냐”(미국의소리)

-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에 직면한 탈북자들의 처지에 우려를 표시함. 모든 탈북자들이 불법 이민자라는 중국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힘.
- 키타나 특별보고관은 27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떠나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이 가혹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함.
- 특히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한다고 밝힘. 이어 중국 당국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함. 또 중국 정부는 모든 탈북자들을 불법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신은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함.

- 키타나 특별보고관은 탈북자들이 북한을 떠난 이유를 개별적으로 파악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선지, 아니면 경제적 이유 때문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함. 그러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북한을 떠난 사람들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함.
- 경제적 이유 때문에 처음 북한을 떠났던 사람들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많다는 설명임. 특히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른바 농르플르망 원칙이 유엔난민협약 가입국인 중국에 적용된다고 강조함.

2017. 10. 30.

■ 인천 내년부터 탈북학생 대안교육 지원한다(연합뉴스)

- 인천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탈북학생의 학교 밖 대안교육을 지원함. 30일 인천시의회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됨.
- 조례는 탈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음.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 또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해 현재 인천의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만6세 이상 만25세 미만 청소년임.
- 조례는 시교육청이 매년 탈북학생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했음. 또 탈북학생 교육지원에 필요한 외부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고교, 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 편입학 등 다양한 학업지원 정보를 탈북학생에게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됨.
- 현재 인천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은 2천725명으로, 국내 전체 탈북민 3만680명의 9.5%를 차지함. 경기(8천755명), 서울(6천957명)에 이어 시·도 중 세 번째로 많음.

5. 대북지원

2017. 11. 2

■ IFRC “북한 홍수 피해 구호 예산 32% 감소”(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적십자사(IFRC)는 1일 지난해 8월 북한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로 인한 긴급구호예산의 모금이 잘되지 않아 목표보다 32% 줄었다고 밝힘.
- 국제적십자사는 홍수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일대 북한 주민 33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구호 예산을 당초 742만1천586스위스 프랑, 미화 약 742만 달러로 1월 책정함.
- 하지만 국제사회의 기금 모금 부족으로 당초 제시됐던 예산보다 32% 감소된 503만7천707프랑, 미화 약 503만 달러로 줄어들어 11만 명을 지원할 예정임. 이같이 사실은 국제적십자사가 1일 공개한 ‘긴급예산개정: 북한 함경북도 홍수’(Emergency appeal revision) 보고서에서 밝혀짐.